범죄 피해자 전담경찰관제 요란만 떨고 운영은 '졸속'

피해자 보호 원년 선포 불구 경찰청 생색내기용 그쳐
광주·전남 32명 배치
사전 업무교육 없이 투입 사건 생겨도 지원활동 없어

경찰이 올해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범죄 피해자 전담경찰관' 제도가 '생색내기용'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올 해를 '피해자보호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전담 경찰관을 지정하는가 하면,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 등으로 조속한 피해 회복을 돕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추진되지 못하면서 졸속 제도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26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의 '피해자 보호 시스템 재정립' 방침에 따라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에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경찰관 32명을 배치, 지난 12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지만 시작하자마자 말 뿐인 전담 경찰관으로 전락한 상태다.

경찰청은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도입하면서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사건 ▲교통사고 중상해·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조속한 상담·지원 활동을 필수적으로 진행해 피해 회복을 돕도록 했다.

하지만 경찰청이 반드시 피해자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펼치도록 규정한 '필수' 사건임에도, 전담 경찰관이 발생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가 하면, 해당 사건을 알고도 관련된 피해자 지원 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동부경찰의 경우 지난 12일 이후 관할 지역에서 강도·폭행 치사 등 피해자 지원 활동을 벌여야할 '필수' 사건이 2건 발생했지만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해당 경찰관과 범죄 피해자와의 상담은 시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전남청도 비슷하다. 목포에서는 최근 2주간 2건의 교통 사고가 발생, 사망자가 잇따랐지만 전담경찰관의 피해자 상담·지원 활동은 진행되지 않았다. 목포 등도 2주간 강도 사건이 발생했지만 피해자를 안정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상담 활동은 미흡했고 지난 15일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구례에서도 전담 경찰관이 사고 자체를 뒤늦게 파악하면서 지원·보호 활동은 미미했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에서는 10건의 교통사고로 10명이 숨졌고, 순천에서는 강도사건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강신명 경찰청장이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 상담·경제적 지원제도 안내 등 내실 있는 실질적 지원 활동을 벌이겠다던 제도가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밀한 검토와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면서 비롯됐다는 내부 비판도 적지 않다.

전담 경찰관 지정만 해놓고 충분한 사전 업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가 하면, 청문감사담당관실 소속 전담 경찰관과 형사·교통·수사부서와의 유기적 협조 체계도 없어 피해자 지원 활동이 필요한 필수 사건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전남경찰청 소속 24명(지방청 3명·경찰서 1명)의 전담경찰관 중 목포·순천·여수를 제외한 나머지 18개 경찰서는 다른 업무를 보면서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까지 떠안게 돼 이름만 전담 경찰관이라는 한계도 엿보인다.

전남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 A전담경찰관은 "2월 경찰서로 인사발령 받고 와서야 감사·민원 업무 뿐 아니라 피해자전담 경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복지서비스 제공않고 보조금 2억여원 '꿀꺽'

복지기관 이사장 등 20여명 입건

광주지방경찰청은 26일 저소득층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 2억여원을 가로챈 광주 모 복지기관 이사장 A(48)씨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와 짜고 보조금을 빼돌린 광주지역 아동센터장 B(48)씨, 체육관장 C(34)씨 등 20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저소득층 아동과 노인 등 559명에게 아동 돌봄, 치매 예방 교육 등 복지 서비스를 규정대로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적정하게 이뤄진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고보조금 2억1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경찰은 부정하게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도록 서구청에 통보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개 도살 사진 SNS 유포 인도네시아인 검거

나주경찰은 26일 개 도살 장면 사진을 SNS에 올려 유포한 인도네시아 국적 A(27)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으며 공범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동료와 함께 나주시 동수동 농공단지 내에서 개목을 밧줄로 묶어 지게차에 매달아 도살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지난 20일 자신의 SNS(페이스 북)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자신이 SNS에 올린 사진에 비난의 댓글이 달리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이슈화되자 공장 일을 그만둔 채 지인의 집으로 피신해 귀국을 준비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8년 취업비자로 입국했으며, 현재 불법체류 상태이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출신 박정동·조사윤 선생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국가보훈처는 제96주년 3·1절을 맞아 광주 출신 박정동·조사윤 선생 등 186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포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포상되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132명)·건국포장(23명)·대통령표창(31명) 등 186명이다.

훈·포장과 대통령표창은 3·1절 중앙기념식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식장에서 유족에게 수여된다.

보훈처는 일제의 각종 행형기록 및 정보문서, 신문보도 기사의 분석, 검토와 적극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이번에 178명의 독립유공자를 새로 발굴, 포상하게 됐다.

광주 출신인 박정동·조사윤 선생에겐 건국훈장 애국장이 각각 추서된다.

이들은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애쓴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949년 포상이 시작된 이후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애국지사는 모두 1만3930명. 포상별로는 ▲건국훈장 1만246명 ▲건국포장 1091명 ▲대통령표창 2593명 등이다. /이종행기자golee@

올해도…신입생 환영회서 사고 대학가 '비상'

여학생 구토 후 의식 잃어…음주 강요 여부 조사

신학기를 앞두고 대학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한 여학생이 의식을 잃은 사건이 발생해 대학가가 비상에 걸렸다.

26일 새벽 3시 22분께 화순군의 한 리조트에서 광주교육대학교 신입생 A(19)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학과 조교가 119구급대에 신고했다.

A양은 방에서 구토를 한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학교 관계자가 신고와 동시에 인공호흡을 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양은 심폐소생술을 받고 호흡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의식은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

A양은 현재 전남대병원에서 장기손상 등을 막기 위해 저체온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식 회복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병원 측은 내다봤다.

병원 측은 A양이 음주 후 구토를 한 뒤, 잠을 자던 중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의식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순 경찰은 A양이 선배들의 강요에 의해 과음을 했는 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학생들은 "8명의 학생이 소주 3병을 나눠마셨다"고 말했으며, 대학측은 "A양은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탓에 이날도 심한 음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신입생 300여명이 참석한 광주교대 입학 오리엔테이션 참석차 리조트를 찾은 A양은 교육 프로그램이 끝난 후 방안에서 선배,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광주과기원서 화학약품 폭발 4명 부상

26일 오후 3시 광주시 북구 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부 맴브레인 및 전기화학 실험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사고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 사고로 임모(33)씨 등 대학원생(3명)·학부생(1명) 4명이 다쳤다. 이들은 실험실에서 화학약품을 이용해 배터리 분리막 실험을 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이들이 실험을 마치고 남은 화학약품 폐액을 산성계·유기계·알칼리계·무기계 등을 수집용기에 분리 배출하지 않고 한데 섞어 버리려다 화학반응을 일으켜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환경공학부장은 최근 광주과학기술원 제7대 총장으로 선임된 문승현 교수다.

/김진수기자 jeans@

국정원 이용 선거 개입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고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한국진보연대와 민주국민행동은 26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감시·감독해야 하는데도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조장·방조 또는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점, 국정원이 대통령 직할기구이고 수뇌부 인사 역시 대통령 재가사항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이 전 대통령부터 국정원장, 2·3차장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입안해 실행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간통죄 폐지에 콘돔업체 '상한가'

쌍나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발표 직후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콘돔 생산업체인 유니더스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해 눈길.

○…26일 코스닥시장에서 유니더스는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 소식 이후 폭등해 오후 한때 상한가인 3120원까지 오르는 등 관심주로 등장.

○…이날 헌재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기존의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들이 처벌을 면하게 되면서 향후 사회 풍속 변화에도 주목.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광주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 광전파크 빌라 5층중 3층 34평
■ 정남향, 2013년 신축, 내부 깨끗
■ 방 3, 화장실 2, 거실 1
■ 신우APT 105동 옆
■ 매매 - 1억 6400만원
(대출 1억 가능)
광전파크 "빌라"
주인 직매 H. 010-3605-5000
■ 광전파크 빌라 5층중 4층 20평
■ 동남향, 2013년 신축
■ 방 2, 화 1, 거실
■ 신우APT 근처, 즉시 입주가
■ 매매 - 9900만원
(대출 4900만원 포함)

근린상가 "지하"
■ 광주 동구 산수동 21-5 남양빌라
■ 분양평수 150평(실97평)
■ 감정가/시세-1억5천만원정도
■ 노래방, 탁구장, 골프연습장, 호프, 독서실 등 적합
■ 급매가 - 6200만원
현재 경매 진행중!
1/3 가격으로 매매합니다.
문의. 010-3605-5000

경매투자
▶특수비법 배우실 분
교육비/임장활동비
사무실 사용료(1년) 등
▶2200만원
▶1대1 실전 사례 교육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해결합니다.